

- ◆ [Focus]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철강 생산 지원 정책 방향
- ◆ [What's News]
  - (대러제재) G7 회의에서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논의 예정
  - (대중경쟁) 재닛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아닌 건전한 경쟁 관계 추구
  - (친환경) 美 바이든 대통령 MEF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 (대중경쟁) 미, 대중 투자규제 발표 임박... G7, 동참할까
-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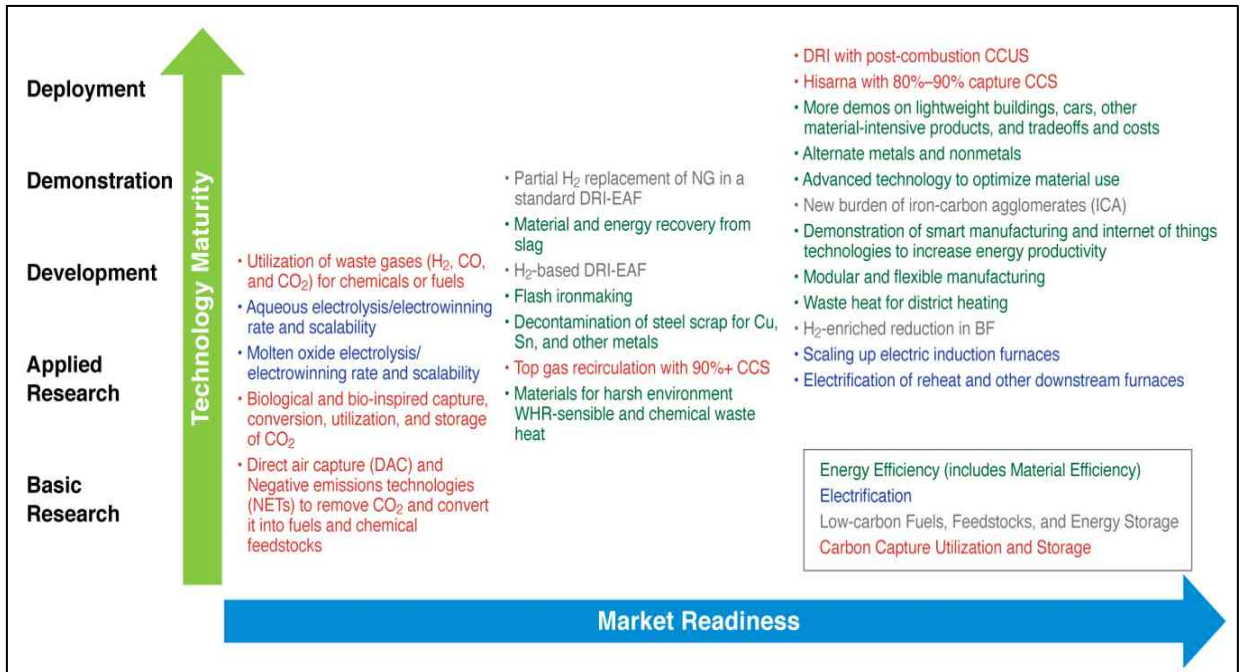
## FOCUS

### [철강]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철강 생산 지원 정책 방향

#### 1. 바이든 정부 철강 탈탄소화 추진 시나리오

- 에너지부는 '50년까지 미국 철강업 탄소 배출을 80% 감축 가능 전망
  - \* '15년 8,600만 톤 ⇒ '50년 1,700만 톤 (Advanced scenario 기준)
  - 궁극적인 목표인 탈탄소화는 고로(BF/BOF) 방식 비중을 1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를 고철을 재활용하는 전기로(EAF), 수소 기반의 DRI-EAF 또는 철광석 전기분해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
- 미국 정부는 철강 탈탄소화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크게 (1) 철강 생산 에너지 효율, (2) 전력 효율, (3)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으로 분류
  - 상기 분야별 기술 개발의 성숙도와 상용화 단계에 따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재정 투입 효과 제고 모색
    -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적 기술인 △수소 기반의 DRI-EAF △철광석 전기분해 △탄소포집 기술은 아직 초·중기 개발 단계로써, 연방정부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

< 철강 탈탄소 기술의 성숙도 및 상용화 단계 분석 >



[자료] 미국 에너지부 (Industrial Decarbonization Roadmap, '22.9월)

## 2. 美 연방정부 탄소 감축 투자 프로그램

### □ 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s (OCED) 신설

- '인프라 투자·고용법'에 근거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탄소 저감 기술 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에너지부 산하에 설립 ('21.12월)
-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탈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을 위한 청정 에너지 시현 프로젝트(Demonstration Projects) 발굴 및 상업화 목적
  - △청정 수소연료 △탄소 배출 관리 △첨단 핵 원자로 △장기 에너지 저장 △공업 분야 탈탄소화 △소외지역 등 시범사업 등 선별 지원

### □ Industrial Demonstrations Program

- OCED가 주관하는 동 프로그램은 '인프라 투자·고용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마련된 예산을 통해 총 63억 달러 투자
  - 철강, 시멘트, 화학, 제지, 식품 등 고탄소 집약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탄소 저감 사업과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예정

- 수혜 대상은 기술 개발기업, 제조 기업, 대학 및 국립 연구소,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주·지방 정부, 비영리 환경 단체 등을 포함하고,
    - △산업재 및 화학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고온·중온 발전에서 탄소 배출 감소, △스마트 기술을 통한 솔루션, △친환경 제조 프로세스 개발 등 사업 심사\* 후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
- \* 에너지부는 4.21까지 기초 계획서(concept paper) 접수, 최종 제안 접수 마감은 8.4 예정

□ **Advanced Industrial Facilities Deployment Program (AIFDP)**

- 에너지 집약산업 시설 내 온실가스 배출 해법 또는 기술에 58억 달러 투자
  - 탄소 저감 관련 신규 장비, 업그레이드, 개보수 및 연구용역 등 프로젝트 대상
  - 공업, 제조업 등 사업자 대상 보조금, 투자 환급, 협력 계약 등 형태로 지원
- 제로 탄소 전기로, 100% 수소연료 환원철\* 기술 등 철강 분야 투자 예정
  - \* 고체상태의 철광석에 일산화탄소, 수소 등 환원가스를 투입해 만든 분말형 철원

**3. 국제에너지기구, 철강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제안**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다음 4단계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IEA, Iron and Steel Technology Roadmap, '20.10월)

- ① **시장 참여자 간 협력 구조 마련 (Stakeholder collaboration)**
  - 정부·철강 제조사·협회가 주도적 역할을 맡고, 중간재 기업, 금융·투자 기관, 기술 기업, 연구소, 비정부 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 유도
- ② **기본 계획 수립 (Framework fundamentals)**
  - 장기적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계획 제시
    - 다층적인 계획과 로드맵 마련 (기후변화, 산업, 철강 섹터, 기업 단위 등)
    - 법률적 정책 마련 (탄소 거래제, 탄소세 등 관련 기준 정립)

③ 구체적인 기술 및 전략 실현을 위한 행동 (Targeted actions)

- 현존 자산 관리 및 단기 투자 : 에너지 효율성 제고로 전환 원활화 지원
- 탈탄소 철강 시장 창출 : 정부의 친환경 조달 및 금융 지원 확대
- 초기 단계 기술 개발 투자 : 민관 합작 투자 지원 및 혁신 기술 공유
- 소재 효율성 제고 : 철강 재활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업 편의 제공

④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 (Necessary enabling conditions)

- △국제 협력 증진 및 기술·금융 기회 공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인프라 개발 △성과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표준 체계 정립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DOE Industrial Decarbonization Roadmap ([2022.9월](#)), IEA Iron and Steel Technology Roadmap([2020.10월](#))

□ (대러제재) G7 회의에서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논의 본격화 예상

- (개요) 미국 포함 주요 우방국, 대러 수출 전면 금지 추진 논의 중
  - 블룸버그통신(4.20자)에 따르면, 5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대러시아 수출을 전면 규제하는 방안이 다뤄질 예정
- (상세) 금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여타 국가의 동조가 관건
  - 현재 해당 논의가 G7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궁극적으로 EU 회원국 전체를 동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등 우방국들은 특정 품목(첨단기술 및 국방 제품 등) 관련 대러 수출금지를 발효 중이나, 이후 **소** 품목\*으로 제재 범위 확대 추진 예정
    - \* 식량, 농산물, 의약품 등 인도주의 필요에 따른 수출품은 제외
  - 전쟁 발발 후 서방 경제 제재의 효과로 EU 및 G7 국가로부터 대러 수출은 49% 가까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EU·미국·캐나다·일본으로부터 수출액이 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전망) 일부 국가 및 재계의 저항으로 최종 합의 도달 가능성 불투명
  - 전방위적 대러 수출금지 확대에 대해 일부 EU 회원국과 재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러시아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도 우려
  - G7은 대러 제재를 회피하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관련자 처벌 강화 방안 마련 예정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블룸버그( <a href="#">4.20</a> ), EU 집행위( <a href="#">홈페이지</a> )

## □ (대중경쟁) 재닛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아닌 건전한 경제 관계 추구

- (개요) 재닛 옐런, 연설에서 건전한 미중 경제 관계 구축 필요성 강조
  - 美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경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4.20)
- (상세) 중국 부상 억제나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목표하지 않는다 언급
  - 중국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접근으로 세 가지 중점 사안 제시
    - 1)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국가안보 이익 및 인권 보호
    - 2)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건전한(healthy) 경제 관계 추구
    - 3) 오늘날의 글로벌 과제(기후위기·부채대응 등)에 대한 협력
  - 국가안보 확보와 인권 보호는 타협 불가능한 영역으로, 중국의 군사 및 보안 장치로부터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중요하다고 언급
    - \*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고려
  - 중국의 신장, 홍콩, 티베트 등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 언급,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 미국은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경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정한 규칙 속에 중국과의 건전한 경제 경쟁이 상호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 (반응) 미중 관계, 고조되는 안보 갈등에도 경제적 협력 기대
  - 뉴욕타임스는 이번 연설이 美 행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관계에 대해 밝힌 가장 포괄적인 표현(articulation) 중 하나였다고 하며, 수개월 동안 갈등이 고조된 미중 관계에도 실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어조를 보였다고 평가
  - 폴리티코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미국 내 일부 디커플링 심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과는 상반된 주장이라고 지적
  -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도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아니다”라고 언급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재무부(4.20), Politico(4.21), NYT(4.20), AP통신(4.20),

## □ [친환경] 美 바이든 대통령 MEF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 (개요) 백악관, MEF 정상회의 주재, 기후변화 대응 위한 팩트시트 발표(4.20)
  -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 기후변화 대응 동참 촉구
    - \* Major Economies Forum
  - MEF는 2009년 3월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설립한 협의체로, 청정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G20)과 EU, UN 등이 참여 중
    - \* MEF 참여국들은 전 세계 GDP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배출
- (상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52% 감축과 1.5°C 제한 목표 강조
  - (개도국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긴밀히 협력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10억 달러 지원
  - (에너지 탈탄소화) 전력 및 운송 등 에너지 관련 부문 진전 가속화, IRA 등 무공해 차량의 제조 및 보급 확대와 더불어 EPA 차량 배출 기준 강화 등
    - \* 같은 날, 국가혁신경로보고서(National Innovation Pathway)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35년 까지 탄소 무공해 전기 부문 목표 달성 추진
  - (아마존 산림보호) 브라질 아마존 펀드 지원을 위해 미 의회에 5년간 5억 달러 지원을 요청하고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 중단 요구
  - (탄소 포집) 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 발전을 위해 각종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보조금 지원, 활용 및 저장(CCUS)을 위한 투자 지속 등
    - \* 인프라법 내 차세대 탄소 포집, 직접 탄소 포집 등 120억 달러 이상 투자 포함
  - (기타) 메탄 및 기타 비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의 감축 노력 계속
    - \* 국가메탄감소 이니셔티브 발족, 화석에너지, 폐기물, 농업 및 식품 부문 신규 프로젝트 런칭 등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4.20), WP(4.20)



## □ (대중경쟁) 미, 대중 투자규제 발표 임박... G7, 동참할까

- (개요) 언론은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고 보도
  - 폴리τικο, 미 행정부가 산업계 관계자들에 발표 임박한 행정명령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
  - 또한 블룸버그는 미국이 G7 국가들에 대중 첨단산업 투자규제 동참을 장려 중으로 다음 달 정상회의 즈음에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보도
- (상세)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대중 투자 규제 유력
  - 폴리τικο에 따르면 신규 투자 관련 신고 의무 외에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금지 의제가 채택될 것이며,
  - 벤처 캐피털·사모펀드 투자, 기술 이전 및 JV도 규제 유력
  - 엘런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결정임을 밝혔으며
  - 행정부는 최근 움직임\*이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대중 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
  - \* 제이 샴보 재무부 차관은 지난 10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이나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발언
- (전망) 4월 말 발표 유력하나 국제적 공조 후 발표될 가능성도 존재
  - 전문가들은 작년 말 발표를 예상했으나 정부의 역할과 규제 대상 산업분야를 두고 재무부와 NSC 간 이견으로 해를 넘김
  - \* 당국은 공격적인 규제가 양국 경제를 침체의 수렁에 빠뜨릴 것을 우려
  - 폴리τικο는 2월 보도에서처럼 4월 말을, 블룸버그는 5월 19일로 예정된 G7 전후\*를 행정명령 발표 시기로 예측
  - \* 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동참이 없으면 미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다른 나라 자본이 대체할 뿐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강조

- |       |                            |
|-------|----------------------------|
|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 ■ 자료원 | 블룸버그(4.21), 폴리τικο(4.18) 등 |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a href="#">Lyft to Cut at Least 1,200 Jobs in New Round of Layoffs</a> (리프트, 최소 1,200명 추가 정리해고 예정)
	이번 정리해고는 현재 리프트의 4,000명의 임직원 중 30% 이상을 영향 줄 수 있어. 리프트는 작년 말 700명을 해고한 바 있음.
The Washington Post	<a href="#">Kremlin tries to build antiwar coalition in Germany, documents show</a> (크렘린, 독일에 반전 여론 조성을 희망한 것으로 보여)
	지난 2월 독일에서 있었던 반전 시위는 독일의 좌우익 양극단이 참가했었음. 최근 유출된 문건에 의하면 지난 9월부터 러시아가 관련 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여
New York Times	<a href="#">The Debt Ceiling Debate Is About More Than Debt</a> (부채상한 논쟁은 부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채상한 협상을 위한 공화당 제안은 부채 절감보다는 에너지 정책에 초점. 석탄연료 생산 확대와 IRA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제거 등이 담겨있어
CNN	<a href="#">EPA is preparing aggressive new rules for power plant pollution that could prompt legal challenges</a> (미 환경청, 발전소 공해 관련 강력한 규제 준비 중)
	바이든 행정부가 천연가스 발전소에 강력한 규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작년 연방 대법원은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 환경청의 규제 범위를 제한한 바 있음
USA Today	<a href="#">Biden creates office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Here's what that means</a> (바이든의 환경평등 부서 신설의 의미)
	지구의 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평등국의 설립을 발표. 행정명령을 통해 인종차별이 환경 불평등의 주된 요인임을 적시.

\* 미국 동부시간 4월 21일 16시 기준

## Notice

###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3	<a href="#">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3.04월
US23-12	<a href="#">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a>	2023.04월
US23-11	<a href="#">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a>	2023.03월
US23-10	<a href="#">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a>	2023.03월
US23-09	<a href="#">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a>	2023.03월
US23-08	<a href="#">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a>	2023.03월
US23-07	<a href="#">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a>	2023.03월
US23-06	<a href="#">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a>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헤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a href="#">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a>	2023.01월
US22-기 획6	<a href="#">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a>	2022.12월
US22-기 획5	<a href="#">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a>	2022.12월
US22-기 획4	<a href="#">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a>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0 (2023.4.17)		
코인시-9 (2023.3.15)		